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호남 민심 공략...30일 첫 합동연설회

나경원 출마선언 직후 5·18묘지 방문·참배 주호영 “비례대표 절반 청년·호남 인사 할당”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호남 민심 공략에 본격 나선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

5·18 유족단체장과 차담회를 갖는다. 나 전 의원의 5·18 민주묘지 방문은 당권 주자로서 첫 공식일정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호남 민심 잡기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끌어안기 위한 '서진 전략'이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첫 순회 합동연설회

도 광주에서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 대한 공약 등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전 의원 이외에도 다른 당권주자들이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

은 지난 19일 비례대표 절반을 청년과 호남 인사에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이 호남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청년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호남과 청년,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전국 정당, 세대 간 융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이 이달 초 전남 무안을 방문해 “현재 명예 휴산면민”이라며 “심마을 주민들에게 하늘길을 열어 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도 높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휴산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윤석열, 예쁜 포장지만 보일 뿐...알맹이 보여야”

“내용 전혀 모르겠어...국민에 전부 보이는 게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물)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창립식' 후 만난 기자들이 윤 전 총장 지지모임도 '공정'을 주제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비자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총장 지지모임 격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 포럼은 오는 21일 발족한다. 그는 “누군가가 살짝살짝 보여주는 부분적인 포장지밖에 내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윤 전 총장도)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부를 다 우리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며 “한번 써보더라도 해야 하는데 포장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줘서 판단하기 어려워 더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는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진 후 윤 전 총장이 잡행을 이어가는 것을 예들려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목포 찾은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 배제된다

소병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12월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 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소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예방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소병철 의원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정의당 “輿 역주행...집값 오를 때마다 과세 대상 줄일 건가”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6억원→9억원) 조정 방침에 대해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4.2%를 위한 감면 정책으로 전체 세제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던 비정상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이며 서울은 70.6%다. 민주당이 말하는 6억원과 9억원 사이에 있는 비중은 단 4.2%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이라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